

야권, 이태원 참사 국조 이번주 제출

〈민주·정의〉

“국민 뜻 받아야 할 국회,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국힘에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 분향소를 매일 같이 다녀가지만 책임 있는 사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다”며 “참사가 있고 지난 6일 동안 목격한 건에도 정국 속은 책임 회피, 제식구 잡싸기가 아닌가 하는 시민의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마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함으로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의 정확한 방향 원칙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장 일선 경찰을 수사하고 균중 속 토끼머피 추적은 진상 규명의 본질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에서 용산구청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서울사와 용산구청 다섯 개 기관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 노력”이라며 “국민의힘도 세월호 참사처럼 시간을 끌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정의당 이 원내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원내대변인.

나 하는 태도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국정조사 성사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말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사고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민 뜻을 받아들여야 할 국회는 더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조건을 내

걸고 사실상 거부했다. 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라며 “제발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수사와 증척하는 건 진실 밝히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진실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습니만 만약 설득이 안 되면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또 뜻을 갈

이 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늦어도 다음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기 및 범위를 정의당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국민의힘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내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냐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하루 이틀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가 여지를 두고 가겠다는 생각”이면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반드시 보고는 되도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많이 요구했으면서 그런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버리고 있는지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앞서 제시했던 ‘여야정 이태원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정부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없지 않나. 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조사법”이라고 말했다. /뉴스

“대통령·행안부 장관 와서 사죄하라”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근조회환을 내동맹이던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죄를 요구하며 경찰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

민주,尹 법회 이태원 참사 사과

“유가족·국민 수궁할지 의문”

“늦었고 미흡...尹 본인, 정부 책임 불분명”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법회에서 한 사과 발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이 수궁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사과는 너무 늦었고 미흡하다”며 “사과는 정부 책임 인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에 본인과 정부 책임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 책임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해 분명하고 속도 없으며 “정부의 책임 방기로 일어난 참사가 책임 회피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과는 유가족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오늘 사과에 유가족과 국민이 수궁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종교계 추도 행사에 가서 사과는 진전된 태도로 본다”

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희생자와 국민께 제대로 사과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안다”며 “유가족과 치료 중인 분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공식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첫 사례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소에서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

“권력기관 예산만 4700억+ α... 민생예산 증액추진”

민주,내년 정부예산안 총평...심사방향 공개

어르신 일자리·경로당 냉난방 지원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단계별로 인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증액

중기·소상공·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권력기관 관련 예산만 47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감액해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총지출 639조원은 13년만에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조5000억원 감액된 규모”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회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급재정지원금 등 경기부양을 더욱 신속하게 집행하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전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

부지급에 등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6조 4000억원 감소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안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 397조1000억원에 비해 3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시행령 통치예산 등 권력기관 예산 비중이 약 5000억원 상당임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는 민생·경제·안전 등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305억원, 권력기관 예산 3387억원 증액, 시행령 통치 예산 824억원 이상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지역시장상품권 7000억원 전액 감액, 임대주택 예산 6조2000억원 감액,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원

감액 등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 중 민생사업 예산이 69개, 925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시재생사업 2670억원 감액,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417억원 감액 등 79개 경제·기후대응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줄었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859억원 감액, 119구조장비 확충 12억원 감액,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4억원 감액 등 52개 안전사업 예산은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에 “초부자집계를 반대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불요불급한 사업 등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예산, 경제·기후대응예산, 국민안전예산 등을 증액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 621100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 지원 확대(957억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1조6000억원)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증액(1882억원) △쌀값 안정화 예산 확보(1959억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1조 2797억원) △장애인지원 예산 확대(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3281억원) 등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은 안전, 지역회생,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층 지원 임대주택, 청년, 쌀값 안정화, 장애인 등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반대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 증액 요구한 것이다. 예산편성이 정부 권한이지만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증액 요구엔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예산 심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예산심사자) 국회 뒷인 만큼 긴밀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국회 국방위, 국방예산 수정 의결... 정부안 대비 7800억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위한 예산 집중 증액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9700억원을 증액하고 1886억원을 감액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대비 7834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 확보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 의결했다.

국방위는 병사·생도 등 영내자를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공급을 위해 기본급식 예산 582억원, 부사관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야간·휴일수당 250억원을 증액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Kil-Chan)의 핵심전력 확충을 통한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F-X 2차 사업 200억원, 230mm급대포장 사업 1738억 8200만원, K-21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 800억 33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시립평가 일정 지원을 고려해 중요시설경계시

스템 사업에서 208억1700만원, 기술이전 협의 등으로 개발업체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130mm 유도로켓-II 사업에서 195억1900만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에서 208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신원식 예산수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전투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재난발생 우려 시설 정비”

특교세 695억 지자체 지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정비를 위해 695억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교세 총 485억7000만원은 지난 9월 태풍 ‘한남도’로 인해 피해 입은 시설을 복구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비 부담액이 큰 지자체에 454억 5000만원을 피해 규모와 재정력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 중 피해가 컸던 곳에 3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나머지 210억원은 지난 8~10월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시 발견된 안전취약시설 47개소를 긴급 보수·보강하는 데 쓰인다. 낙석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와 호수 시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노후 저수지 등이다. /뉴스

무주군의회, 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 4일 최북아슬관 다목적 영상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해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란 무엇인가, 예산 편성과 집행·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등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이해양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제23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대비하여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제9대 무주군의회 출범 이후



실시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성실히 임해주시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열고 그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